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2/ 22 통권 1611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쾌락접대를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대손금 Q&A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  
조치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주차장 임대사업 위해 상가건물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아님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개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범위	모든 법인, 연매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 자
과세기간	매년 6개월 단위(1-6월, 7-12 월)	매1년단위(1-12월 연 합산)
세율 · 세액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업 종별 부가가치율(15~40%)
세금계산서	모든 매출액에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연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매입세액 차감 (일부 열거된 항목은 제외)	매입세액(통상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 조 · 가공한 모든 사업에 적용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회계	매출과 매입원가 아님(부가가 치세는 비용 아님)	매출 부가세 포함 총 공급가액, 부가세도 비용인정
기장의무 등	복식기장의무 있음	영수증, 세금계산서 보관으로 충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정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1호 / 주간 8호

2023. 02. 22.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2
C E O 에 세 이	CEO는 쾌락접대를 받지 않는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문의 -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 업무 사용 렌트 차량 관련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 공사현장 타인차량 파손시 처리방법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 퇴직소득세 인하	9 10
직 장 인 Survival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15가지 지혜 - ②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안-106, 2022.03.29) -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기업부담 줄인다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주차장 임대사업 위해 상가건물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아님	12
세 무 정 보	- 대손금 Q&A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15 36
경 영 정 보	-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37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업무구분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국민주택 자체+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설계용역 등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재하도급	건설사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하도급(하청) +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건설용역도 면제함
겸용주택건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됨
국민주택건설 위한 철거용역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 수리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u>아님</u>
하자보수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사업자가 당해 국민주택에 하자보수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숙사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과세임
무면허 건설용역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u>과세함</u>
별도계약 선택품목의 공급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 계약으로 발코니샷시, 홈오토메이션, 인터폰, 장식장, 신발장 등 설치하여 주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부채납 도로개설공사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도급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다른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u>아니함</u>

# CEO는 쾌락접대를 받지 않는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많은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에서는 ‘판시’(關係)가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또 중국 인들도 판시를 강조한다. 그래서 서로 그 판시를 만들고 굳건히 하기 위해 술과 쾌락의 접대를 주고받는다.

중국과 수교 이래 대체로 한국기업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미래의 거대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생산기지는 필요한 일이었다. 관광도 검사 검사 중국의 합작파트너도 물색하고 또 공장부지와 조건을 탐색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이 중국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유치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수많은 중국인들 고용창출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또 해외기업이 원치 않더라도 중국보다는 나은 선진기술이 결국 중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말하자면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서 중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일이다. 기왕에 시장개방을 통해 중국이 세계시장에 등장하는데는 아주 긴요하다. 그래서 해외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은 관광이건 산업시찰이건 공장이전 조사이건 무조건 환영할 입장이다.

그래서 공장허가를 맡은 중국관료이건 민간 합작파트너이건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기업가들을 극진히 모실 조건들이 넘쳐나 있었다. 특히 중국관료들 입장에서는 해외기업의 유치가 그들의 평가와 보상에 반영되는 실정이고 보면 광적 접대도 불사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한국이건 중국이건 관료의 속성상 돈 쓰는 일이 주인 없는(?)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기업의 임직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해외기업유치를 위해 돈을 펄펄 써도 누가 딱히 말하지 않는 풍토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 오히려 핑계거리로 떼지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같았다. 설사 유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언필칭 ‘중국식 자본주의’의 새로운 길을 가는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서로 눈감아 줄 일이었다.

원래 중국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지극히 즐기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중국은 정말 먹는 게

무지무지하게 발달한 나라다. 원숭이 골에서 곰발바닥까지 음식이 안되는 게 없다. 서양사람들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약간 비꼰 말이 생각난다. “중국사람들은 먹어서 망하고 한국사람들은 입고 허세부려서 망하고 일본사람들은 돈 안 써서 망한다.”

IMF이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쿼터 높은 줄 몰랐고 또 간이 부었었다. 꼴볼견이 많았다. 약간 벌어진 소득격차와 중국의 싼 물가 때문에 한국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술과 쾌락을 싸게 살 수 있었다. 국빈 모시듯 발벗고 나서는 중국관료들과 합작 파트너들의 접대를 판시의 증대로 믿고 싶었다. 먹고 마시고 싼값에 쾌락을 즐겼다. 공장이전을 곧 할듯하면서 평평 큰소리치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다.

허풍은 결국 거짓말이 되곤 했다. 직업상 같이 다니면서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 한국에서는 꽤 그럴싸한 위치에 있는 지도급 인사가 중국의 술집에서 10달러로 호스테스를 농락하던 일은 지금도 역겹다. 자기 구두에 위스키를 따르고 그것을 그녀에게 마시라는 것이다. 그러면 10달러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졸렬하고 치졸한 어글리 코리언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접대를 주고받는 중국인들과 판시를 쌓았다고 착각했다. 판시를 빙자하여 한국인들의 치졸함과 졸렬함을 중국인들에게 차곡차곡 인식시켜왔다. 이런 것이 판시가 결코 아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0일(금)	2월 13일(월)	2월 14일(화)	2월 15일(수)	2월 16일(목)
미	달 러 (USD)	1263.10	1264.30	1274.60	1269.90	1279.30
일	본 엔 (JPY)	960.79	961.48	962.43	954.06	955.27
영	국 파 운 드 (GBP)	1530.75	1523.48	1546.85	1546.04	1539.51
캐	나 다 달 러 (CAD)	938.83	946.86	955.72	951.98	954.99
홍	콩 달 러 (HKD)	160.91	161.07	162.37	161.78	163.03
중	국 원 (CNH)	185.86	185.92	186.58	186.21	186.77
유	로 화 (EUR)	1356.44	1349.70	1366.69	1363.24	1367.70
호	주 달 러 (AUD)	876.02	873.82	887.76	887.28	883.55
싱	가 폴 달 러 (SGD)	952.96	950.57	959.18	955.71	957.8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2.66	291.82	292.17	292.03	291.25

###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문의

**Q** 당사는 일반 법인으로 일정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으로 처리하면 될런지 여부입니다.

**A**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Q** 제목 관련 2개 질의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명확히 수출에 해당할 경우,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구매확인서 금액이 영세율 공급가액보다 클 경우, 차이 조정이 필요한지?

**A** 1.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 없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구매확인서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어도 차이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환급처리문의

**Q** - 당사는 교육업체로 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수강권(약 7만원)을 판매하고 있음  
- 1개월 수강후 일정요건(출석, 카페 후기작성 등)을 갖추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고 있음.  
현재 위의 요건을 갖추고 환불할때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몇십 몇백명으로부터 일일이 주민번호를 받기가 힘들고, 주민번호 제출도 거부하는 고객이 있어서 처리가 곤란한데  
-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적당한지요? 혹 다른 처리 방법인 있을까요?  
- 추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며 환급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하고 주민번호 제출 거부자는 기존 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데 괜찮을까요?

- A** 귀사의 의견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환급되는 금액은 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환불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주민번호 제출 거부자에 대해서는 매출취소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사용 렌트 차량 관련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 Q** Host 차량 및 특수차량(경찰차, 소방차 등) 렌트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차량 렌트 목적은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카메라 data 수집입니다.

- A**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는 9인승 이상의 차량 및 트럭, 소방차 등의 임차비용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303] , 2020.01.31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사현장 타인차량 파손시 처리방법

- Q**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 파손이 생겨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카센타에서 수리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때, 회사에서 증빙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A** 피해보상금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인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구비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된 세액을 정정신고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정상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등 오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수정신고를 하는 시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50%, 6개월 초과 후부터 1년내는 30%,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만을 준용하고 있어, 대리납부의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조세 22601-377, 85. 3. 27, 부가 22601-1730, 88. 9. 28).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  
진납부계산서도 함께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감액경정청구는 세금과다 납부시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감액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  
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감액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년이  
라는 기한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판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  
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  
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못한 경우(무신고자)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  
면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서 등의 작성요령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기한후 신  
고이므로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된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  
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 0.5%'의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  
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30%, 3개월 초과 6  
개월내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는 20%의 가산세가 경감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1,400만원~5,0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법인세율 인하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 퇴직소득세 인하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6~10년	15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1~20년	4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2. 증여특례 내용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30억원 이하는 10%, 초과분은 20% 증여세율 적용	과세가액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는 10%, 초과분은 20% 증여세율 적용 * 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3. 증여자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최대주주&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4.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7년 (기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7년간 유지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사후관리 기간) 5년 (기업 유지)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간 유지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15가지 지혜 - ②

8. 매일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한다.

취미나 외부 세계에 흥미를 갖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매일 기분을 즐거운 일로 향하도록 하자.

9. 기분 전환 테크닉을 활용한다.

하루에 몇 번은 잠깐 쉬며 심호흡을 하자. 요가나 명상도 효과적이다. 평온한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10. 가족이나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관계를 쌓는다.

자신에게만 빠지지 말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포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11. 생활을 심플하게 한다.

참고 있는 것,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의 종류는 무엇인가? 스스로 컨트롤할수 없는 일에서 일단 떨어져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것을 힘껏 해보자.

12.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도구를 갖춘다.

마음에 드는 음악, 시, 좋아하는 말, 아름다운 그림 등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

13.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꿔본다.

반대의 일을 해보자. 머리를 쓰는 일이었다면 몸을 움직여 페인트칠, 정원 손질이나 세탁을 한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글을 쓰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4. 몸에 귀를 기울인다.

과일과 채소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몸에 좋은 식사를 하자.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또는 산책을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다. 몸이 원하는것을 하면 머리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15. 대단히 좋아하는 것을 한다.

정열을 기울일 수 있는 일을 할 시간을 만든다.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를 시킬수 있다.

# 최신 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차장임대사업 위해 상가건물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아님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부가-5277, 2022.05.23

### 질 의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06, 2022.03.29

### 질 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교부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함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법규부가-507, 2022.08.18

### 질 의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 석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본건 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 ■ 회 신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 ■ 질 의

- (주)○○테크(이하 "질의법인")는 '00.7월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 A지점이 폐기물 관련 허가사업장인 B지점으로부터 폐기물허가증을 위탁받아 원재료를 수입하고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A지점 명의로 제품수출을 하면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 받았는데
- '21년 폐기물허가증 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B지점 명의로 폐기물 관련 원재료 수입 및 통관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소액이며

※ B지점 명의의 원재료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가능 여부를 질의

- A지점에서는 폐기물을 제외한 원재료 등 수입 및 제품수출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②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임
- \* 질의법인의 전체 수출액 비중은 72.8%이고, 그 중 A지점이 99.8% 차지

질의

-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기업승계 세정지원… 기업부담 줄인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기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확대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시권 들어온 ESG공시…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 확대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가 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KSSB에 전문자문을 제공하고,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공개초안, 토론회, 정보요청서 등)를 검토하고,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를 맡는다.

또한,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정의 발굴에도 나선다.

자문위는 연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할 때마다 부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3월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된다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시행일은 3월 2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 대손금 관련 Q&A

— 국세청, 2023. 2

## 1 대손 가능 채권의 범위

### 사례 1-1 대손금의 개념

- 대손금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 또한 기업들 사이에 채무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을 규제하고자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가능 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례 1-2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여부?

- 상거래 또는 상거래 외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이는 손비에 해당하나,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법법 제19조의2②).

#### (1) 채무보증 구상채권

-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구상채권은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 ②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이 행한 채무보증





-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④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법상 제재목적으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으로 불인정합니다.
- 이 때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손 가능한지?**

- 특수관계인에 채권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대손 가능한 채권입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검토는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 가능성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 해석법인-0554, 2015.10.05.)

**사례 1-4**

**업무무관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후, 대손 사유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하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의 처분손실 또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법 제19조의2②).

**사례 1-5**

**대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특

수관계인 여부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 당시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그 후 해당 채무자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소정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6 채권 포기 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대방인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포기·면제한 경우라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기본통칙 19의 2-19의 2...5).

#### 사례 1-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금액도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 대손금의 조기 회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채권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합니다(법인통칙 19의 2-19의 2...5 단서).
  - (정당한 사유)
    - ①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서이46012-11171, 2002.06.07)
    - ②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 ③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등 (법인46012-1045 , 2000.04.27., 서면-2016-법인-4986, 2016.12.15.)
-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0누55499 판결)

**사례 1-8 채권포기금액은 무조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채권 포기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도가 있는 손비인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권포기액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따라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채권이고, 해당 채무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면 손금에 산입 가능한 "기부금"에 해당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 1-9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 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사례 1-10 매출채권을 회수할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손금은?**

-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중 수령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866, 2009.7.29.)

-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방문상담3팀-280, 2008.02.05.)

### 사례 1-1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2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사례 2-1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①·③).
- 강제 대손사유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고
- 임의 대손사유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강제 대손사유

-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으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⑦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2. 임의 대손사유

- ① 해외 물품(용역) 채권 중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③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다만,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⑦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손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사례 2-2 거래처 폐업, 부도어음 등 임의 대손사유는 경정청구 못하는지?

- 임의 대손 사유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고, 회계장부에 비용 계상한 경우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등 강제 대손 사유 발생하는 경우 그 강제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③).

### 사례 2-3 2020년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2022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2020년도에 채권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2022년도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채권(자산)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빠뜨렸을 뿐입니다.
-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 46011-21388, 2000.11.30.)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

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  
인-2289, 2017.11.30.)

#### 사례 2-4 19년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손비처리 못했는데, 비용 인정 못 받는지?

- 1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과-1689, 2008.07.23.)

#### 사례 2-5

####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그 후 임의 대손 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 가능한지?

- 대손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된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에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임의 대손 사유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2019.03.28.)

### 3 대손사유: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사례 3-1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 3-2 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 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임(법인 22601-3329, 1987.12.11.)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매출 거래의 발생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2004.06.22.)

### 사례 3-3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 소멸시효 진행 중에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서면-2018-법인-1893, 2018.09.14.)

### 사례 3-4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내용증명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면 소멸시효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려면)
    -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소송 외적인 의사에 통지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나타납니다.

### 사례 3-5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3년과 상법상 5년 중 선택 적용 가능한지?

-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 또는 1년이 적용되는 경우, 상법상 시효 5년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민법상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되는 상사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 2005부1853, 2005.08.17.)

### 사례 3-6 공증을 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에서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으로 되는지?

- 외상매출금등을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판결 등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출채권을 공증한다는 표현은 통상 매출채권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 준소비대차란 원래 소비대차가 아닌 것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매출채권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했다하여 상거래 외 민사상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사채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또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이 될 것입니다.
- 다만 사례 3-7과 같이 채무승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7 공증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지?

- 매출채권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발행은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사례 3-8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승인'이란 무엇인지?**

-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 하는 것입니다.
  - (방법) 승인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시)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판례)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경우. 그것은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서 그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사례 3-9 하도급 대가로 지급한 선금금의 소멸시효는?**

- 건설공사 선금금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이므로 5년입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선금금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법원46012-202,2001.01.26.)
  - 해당 선금금은 건설업자(상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금전이기 때문에 선금금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대여금채권(소멸시효 10년)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례 3-10 일부 채권만 변제받았을 때, 잔여 채권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이 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모든 잔여채무에 대하여 승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기산됩니다.
-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2017.06.07.)

## 사례 3-11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 가능한지?**

-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이 아닙니다.
-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2019.10.17.)

## 사례 3-12

**세무사의 직무채권이 민법상 단기소멸 3년인지?**

- 세무사의 직무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세무사의 직무채권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무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 판결)

## 4

**대손사유: 회생등 면책채권**

## 사례 4-1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 회생은 기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경우,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계속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절차임
-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중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사례 4-2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책된 채권의 확인방법은?**

-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또는 회생계획인가 공고(대법원 공고/회생·파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4-3****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회생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취득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대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법인령 제72조② 제4의2호 단서).
-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부가령 제87조①제2호).

**사례 4-4****회생인가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세의 손금은 왜 안 되는지?**

-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인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시켜 기업 회생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 또한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하여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고, 채권자에게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실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처분시점까지 이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소비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07.07.)

## 사례 4-5

###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무상감자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 출자전환된 주식 전량이 감소된다면 그 손실을 인식할 수 있으나, 출자전환 주식의 일부가 무상감자 되는 경우 손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861, 2015.09.30.)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59, 2010.04.22.)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 사례 4-6

###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상환받는 채권을 조기 회수 조건으로 할인해 주는 금원은 대손금이 될 수 있는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상환받는 채권을 조기 변제받으면서,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법령해석과-1660], 2019.06.27.)

## 사례 4-7

### 동일 사업연도에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거래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같은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상환 받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2016.09.07.)

## 5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 사례 5-1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사례 5-2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2020년도 이후 손비로 계상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 "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 사례 5-3 회수기일이 변경되면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수기일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을 기산하면 됩니다.

(거래내용) 상품을 20. 1. 20. 판매하고, 그 외상대는 20. 2. 28. 받기로 함  
 그 후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외상대를 20. 12. 31. 받기로 약정함  
 (회수기일) 변경기일 20. 12. 31. ⇨ 2년 지난 날 ⇨ 23. 1. 1. (초일 불산입)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 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 -2020-법인-4044, 2020.11.30.)

#### 사례 5-4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2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22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동 사안에 대하여 22년도 손비 가능하며,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답변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 -2020-법인-5988, 2021.01.29.)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 사례 5-5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2020.10.21.)



## 사례 5-6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 6

##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등

## 사례 6-1

파산과 청산은 어떻게 다른지?

- 파산은 채무초과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재산을 정리하여 환가 및 배당하는 절차이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청산은 파산의 원인(채무 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청산인이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 사례 6-2

파산에 따른 대손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 파산으로 인한 대손 가능시기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어 그 배당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배당표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파산종결(파산폐지)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선순위 채권 과다 사유 등으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때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통칙 19의 2-19의 2...1)
-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함 (대법원/공고/회생·파산)
- (파산절차)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 집회 ⇨ 채권조사 ⇨ 환가·배당 ⇨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

## 사례 6-3

파산 선고일을 대손확정 시기로 볼 수 있는지?

- 채권 회수 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파산 선고일을 대손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배당표가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반드시 배당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할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544, 2012.5.16.)

#### 사례 6-4

#### 사업자등록상 폐업된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해도 되는지?

- 사업자등록 폐업여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속 수입금액,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해산 및 청산법인이고 회수할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2019.03.08.)

#### 사례 6-5

#### 외상대를 갚지 않고 거래처인 개인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해도 되는지?

- 사망했다고 하여, 바로 대손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살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7

## 대손사유: 해외 매출채권등

## 사례 7-1

**해외 매출채권도 상법상 소멸시효나 임의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이 가능한지?**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다른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불능확인서 : 2019.2.12. 삭제되었다가 2021. 2. 17. 다시 대손사유로 추가됨

-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06.29.)

## 사례 7-2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음

- ①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②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③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검사

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8 기타 대손 관련 쟁점

### 사례 8-1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통칙 19의 2-19의 2·6)
-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서면2팀-84, 2004. 1. 27.)

### 사례 8-2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 사례 8-3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법인은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입증서류]

- ① (세금) 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
- 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 · 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
- 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 <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 · 동산 조사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계속 수입 발생 여부
  - 그 밖의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 그 외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 ⑥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 (필요한 경우)
- ⑦ 기타 대손 사유별 입증자료

## 〈대손 사유별 입증자료 예시〉

대손사유	입증 자료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 경과채권 - 2년,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 확인가능 서류</li> <li>대금 청구내역 확인 서류</li> <li>소멸시효 중단 관련 입증자료</li> </ul>
회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생계획인가 결정문</li> </ul>
파산, 강제집행(경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배분계산서</li> <li>강제집행불능조서</li> </ul>
해외 용역(수출)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무역보험공사 발급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li> </ul>
사망·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정승인, 상속포기, 실종선고)가정법원 판결문</li> <li>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가계도</li> </ul>
부도어음·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도어음 원본, 거절증서 등</li> <li>부도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어음 :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업무 - 전자어음 (<a href="http://www.unote.kr">www.unote.kr</a>)</li> <li>일반어음 :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업무 - 어음정보센터 (<a href="http://www.knote.kr">www.knote.kr</a>)</li> </ul> </li> </ul>
화해, 화해권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사조정·화해 조서 또는 결정서</li> </ul>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행정안전부, 2023. 1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li> <li>*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li> <li>-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li> </ul> </li> <li>○ 종합부동산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li> </ul> </li> </ul>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li> </ul>

-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감독원, 2023. 2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23.1.31.)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해 왔습니다.
- 2022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 대비 4,269사(12.8%)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하였습니다.
    - \* ['19년] 32,434사 → ['20년] 31,744사(↓2.1%) → ['21년] 33,250사(↑4.7%) → ['22년] 37,519사(↑12.8%)
- 2022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 대비 7사(0.4%) 증가하였습니다.
  - 주기적지정이 677사로 가장 많고, 상장예정법인 460사, 재무기준\* 미달 346사, 관리종목 130사 등의 순입니다.
    -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지정회사수는 新외감법 이후 매년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은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이 증가한 반면, 상장예정법인 감소 등이 상쇄되어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 \* ['19년] 1,224사(75.1%) → ['20년] 1,521사(24.3%) → ['21년] 1,969사(29.5%) → ['22년] 1,976사(0.4%)



## 2022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22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 대비 4,269사 (12.8%) 증가하였음

-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 (외감대상 현황) 2022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 대비 4,269사 (12.8%) 증가
  -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후 2021년부터 지속 상승
    - \* 자산 120억 이상 등 (①자산 120억원 ↑, ②부채 70억원 ↑, ③매출액 100억원 ↑, ④종업원 100명 ↑, ⑤사원 50명 ↑(유한회사 限)), 일부 SPC 등 외부감사 제외
  -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사로 전년 대비 8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4,977사로 전년 대비 4,184사 증가

##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2.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소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1	815	1,511	131	2,457	30,315	32,772	478	33,250
2022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증감 (비율)	4 (0.5)	80 (5.3)	1 (0.8)	85 (3.5)	4,096 (13.5)	4,181 (12.8)	88 (18.4)	4,269 (12.8)

- 자산총액별로는 200~500억원 12,639사(33.7%), 100~200억원 11,286사(30.1%), 500~1,000억원 5,385사(14.4%) 순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6,398사(97%), 3월 결산법인 479사(1.3%), 6월 결산법인 284사(0.8%) 순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2.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분 \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주권 상장법인	-	1	18	-	-	15	1	1	9	-	5	2,492	2,542
비상장법인	18	17	461	15	20	269	12	22	157	52	28	33,906	34,977
합계 (비율)	18 (0.05)	18 (0.05)	479 (1.3)	15 (0.04)	20 (0.05)	284 (0.8)	13 (0.04)	23 (0.06)	166 (0.4)	52 (0.1)	33 (0.09)	36,398 (97.0)	37,519 (100.0)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6,096사(69.6%)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4,152사(11.1%)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7,271사(19.4%)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22.12월말 기준)〉

(단위: 사, %)

감사인 변경여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계속선임	1,543	24,553	26,096	69.6
변경선임	941	3,211	4,152	11.1
신규선임	58	7,213	7,271	19.4
총 계	2,542	34,977	37,519	100.0

II

2022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022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 대비 7사 증가(0.4%)하였으며, 주기적지정 677사, 상장예정법인 460사 順

-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지정현황) 2022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 대비 7사 증가(0.4%)
- 지정회사수는 新외감법 이후 매년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은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이





증가한 반면, 상장예정법인 감소,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 폐지 등 영향으로 소폭 증가

\* ['19년] 1,224사(75.1%) → ['20년] 1,521사(24.3%) → ['21년] 1,969사(29.5%) → ['22년] 1,976사(0.4%)

-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3%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5.3%,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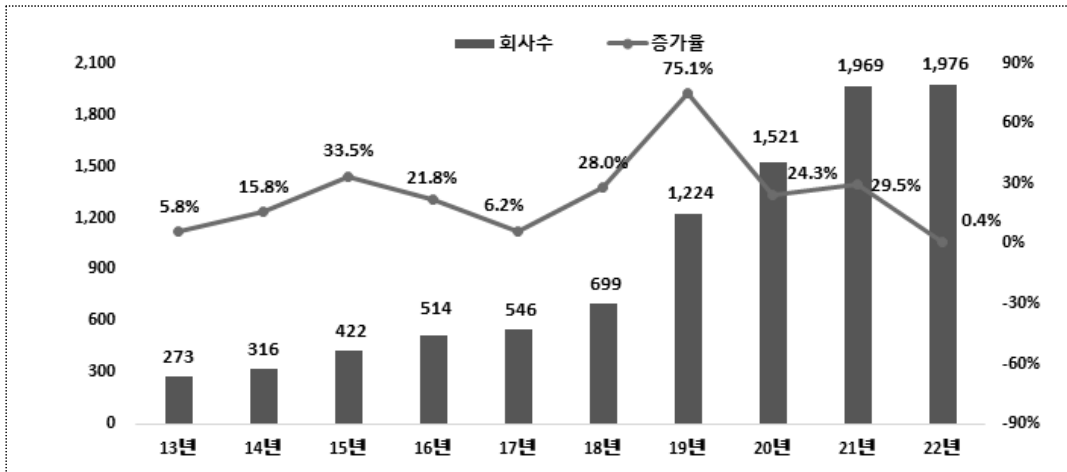
####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구분	지정연도	2021		2022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주)		1,969	1,256	1,976	1,152
외부감사 대상회사(B)		33,250	2,457	37,519	2,542
지정비율(A/B)		5.9%	51.1%	5.3%	45.3%

주)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22년에 2023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022년 지정회사 수에 포함

#### 〈최근 10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 □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 회사·유형별 지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21				2022				증감	
	상장 법인	비상장법인		소계	상장 법인	비상장법인		소계	상장 법인	총계
		대형	기타			대형	기타			
주기적 지정	593	77	4	674	531	144	2	677	△62	3
직권 지정	663	143	489	1,295	621	171	507	1,299	△42	4
합 계	1,256	220	493	1,969	1,152	315	509	1,976	△104	7

- (주기적 지정) 상장 531사(유가 219사, 코스닥 312사), 비상장 146사 등 677사를 지정하여 전년(674사) 대비 3사(0.4%) 증가
  - 2022년 주기적지정 상장사(531사)는 계속지정 359사\*와 신규지정 172사이며,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계속지정 80사와 신규지정 66사임
  - \* '21년 주기적 지정된 593사 중 234사(①주기적지정 3년이 종료된 192사, ②'22년 직권지정 사유 발생 38사, ③외감제외 등 지정해제 4사 등)가 감소
- (직권 지정) 상장 621사(유가 169사, 코스닥 390사, 코넥스 62사), 비상장 678사 등 총 1,299사를 직권 지정하여 전년(1,295사) 대비 4사(0.3%) 증가
  - 상장예정법인이 460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346사, 관리종목 130사, 감사인 미선임 121사 등의 순
  -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사유 <sup>주)</sup>		지정연도	2021	2022	증감	증감률
주기적지정			674	677	3	0.4
직권 지정	상장예정법인		481	460	△21	△4.4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266	346	80	30.1
	관리종목		164	130	△34	△20.7
	감사인 미선임		89	121	32	36.0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88	52	△36	△40.9
	부채비율 과다		53	2	△51	△96.2
	감리조치		42	40	△2	△4.8
	회사요청		38	36	△2	△5.3
	선임절차 위반		39	71	32	82.1
	횡령·배임 발생		19	17	△2	△10.5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2	8	6	300.0
	기타		14	16	2	14.3
	소계		1,295	1,299	4	0.3
합 계			1,969	1,976	7	0.4

주)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 지정사유로 분류



## 〈전년대비 증감요인〉

## □ 전년대비 증가

- (재무기준 미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가 증가
- (감사인 미선임) 외부감사 대상 증가와 감사계약 체결기한 내 미체결 회사가 증가
- (선임절차 위반) 감선위 점검대상의 증가와 선임절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적용

## □ 전년대비 감소

- (관리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지정기간(3~4년) 종료와 재무기준 미달 등 신규 지정 사유 발생에 따른 대표 지정사유의 변경
-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지정사유 시행 이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된 회사가 감소
- (부채비율 과다) '22 사업연도부터 부채비율 지정 사유가 폐지

□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976사에 대하여 총 66개 회계법인('21년 92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5사(43.3%)로 전년(716사, 36.4%) 대비 139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6.9%p 증가

##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군	2021	2022	증감	증감률
가군(Big4)	716	855	139	19.4
그외	1,253	1,121	△132	△10.5
전체	1,969	1,976	7	0.4

## 참고 -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登記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주기적 지정(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 '22.10.6.)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 2023. 1

## 주요 내용

- ①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 ②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 1 개 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2 주요 개정 내용

###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 ☐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 (개정)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

습니다.

-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 3 향후 계획

- ☐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http://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 붙임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 Q.1 신설회사, 해외기업은 연결에서 제외하는 비외감기업에 해당하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과 3에서는 해외종속기업의 경우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고,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금액 및 종업원수(규모기준)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등으로 합니다.

- ①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종업원수
- ②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
- ③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 해외종속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나, 국내통화로 환산한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종업원수가 미미한 경우에는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Q.2 지배기업은 '22년 또는 '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의(3)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에 '외감법령 개정 입법에 고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의(3)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에 '외감법령 개정 입법예고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22-G-KQA007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참조

### Q.3 유한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배하는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외감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므로,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지배하는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Q.4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지배기업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서는 외감대상법인이 무보증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파생결합증권 등을 발행하고 각 증권별로 그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기업이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Q.5 ○○지방공기업은 지배하는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은 소재하는 지자체의 회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감법시행령에 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지방공기업은 외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는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도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연결회계처리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회계규정에서 지방공기업이 지배하는 비외감기업 연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 Q.6 최상위지배기업 A가 순차적으로 비외감기업 B, 외감기업 C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A는 C를 연결하는지? (단, A의 특수관계자는 B와 C만 존재)

☞ 최상위지배기업 A가 비외감기업 B를 지배하더라도 B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B가 지배하는 외감기업 C 또한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B와 C를 연결하지 않습니다.